

보건복지 ISSUE & FOCUS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www.kihasa.re.kr

제368호 (2019-11)
발행일 2019. 10. 21.
ISSN 2092-7117

발행인 조흥식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0147) 세종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TEL 044)287-8000 FAX 044)287-8052

아동가구 소득지원제도의 불평등 완화 효과¹⁾



정은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소득보장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 이 글에서는 아동이 있는 가구에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의 불평등 완화 효과를 분석하였음.
- 분석 결과, 아동 대상 소득지원제도의 불평등 완화 효과는 증가하는 추세임. 이는 아동 대상 소득지원제도가 확대되는 추세와 관련이 있음. 특히 보육료 지원이 가장 큰 규모로 확대되고 있어 불평등 완화 효과 또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아동 대상 소득지원제도의 주요한 정책 대상자 집단인 만 0-5세 아동으로 한정하여 분석할 때, 만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분석할 때보다 불평등 완화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는 아동빈곤율과 소득불평등이 낮아지고 있지만 아동 대상 소득지원제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 규모가 크지 않음.
- 또한 아동가구 소득지원제도의 불평등 완화 효과나 빈곤율 감소 효과는 그 크기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임. 따라서 장기적으로 아동가구 대상 소득지원제도의 규모를 늘릴 것을 제안함.

1. 들어가며

- 이 글은 아동을 대상으로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의 불평등 완화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임.
 - 우리나라 정부의 아동가구에 대한 투자 정도를 평가한다는 점, 아동은 미래 국가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자원이라는 점에서 아동가구 소득지원제도에 대한 효과 평가가 필요함.
 - 아동수당, 근로장려세제, 자녀장려세제, 보육료 지원 등 아동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는 일차적으로 부양 아동에 대한 양육비 지출을 고려하여 소득을 보전하고, 이차적으로는 아동가구의 빈곤 예방과 소득재분배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임.

1) 이 글은 다음 연구의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여 수정 및 보완하였음.
정은희, 백승호, 김성아. (2018). 아동가구 소득지원제도 소득재분배 효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아동 대상 프로그램의 재분배 효과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으나 대부분은 국가 비교에 초점을 둔 것임.
 - 그러나 비교 대상 국가에 우리나라를 포함하기보다는 유럽 국가 비교에 관심을 두고 있거나, 미국과 영국을 포함해 유럽 국가를 비교하는 연구가 대부분임.²⁾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비교 분석한 경우에도 우리나라가 분석 대상 국가가 되는 연구는 드물다고 볼 수 있음.³⁾
- 우리나라에서는 아동가구에 대한 소득 지원 방식이 다양하지 않은 만큼 관련 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도 매우 제한적임.
 - 아동이 있는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에 대한 관심은 보육료 지원과 양육수당에 한정되어 있음.⁴⁾
 - 관련 제도의 효과성은 출산 의사, 추가 출산 등 출산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두고 있음.⁵⁾
- 기존의 아동가구 소득보장제도 관련 연구는 아동가구 지원 소득보장정책의 일부(예: 아동수당)만을 대상으로 빈곤과 불평등 완화 효과를 분석하거나, 제도(아동수당과 가정양육수당의 경우 만 5세까지 지원)의 효과를 아동 전체(만 18세 미만)를 대상으로 분석함으로써 아동가구 지원 소득지원정책의 효과를 과소평가할 수 있음.
- 따라서 이 글은 아동가구 대상 주요 소득지원제도인 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근로장려세제, 그리고 자녀장려세제의 연령에 따른 제도의 개별 효과성을 분석하고 아동가구 대상 소득지원제도의 포괄적 효과를 분석하여 향후 우리나라 아동가구 대상 소득지원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소득지원정책을 통한 재분배 효과 분석에는 소득점유율, 소득분위배율, 지니계수, 빈곤율, FGT, 엔트로피 등 다양한 지표가 사용되지만,⁶⁾ 이 글에서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지니계수를 활용하였으며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는 한국복지패널 원자료임.

2. 아동가구 소득지원제도의 분포

- 아동가구나 아동가구 대상 소득지원제도의 정의를 먼저 제시하고 아동가구에 대한 소득지원제도의 분포를 살펴보고자 함.

2) Bradshaw, J., & Huby, M. (2014). Decomposing child poverty reduction. *European Journal of Social Security*, 16(1), 26-51.
 Francesco, F., Paulus, A., & Sutherland, H. (2009). *Measuring the size and impact of public cash support for children in cross-national perspective*. Institute of Social and Economic Research. University of Essex.

3) Bradbury, B., Jäntti, M., & Lindahl, L. (2017). Labour income, social transfers and child poverty. *Luxembourg Income Study Working Paper Series*, 707.
 Maldonado, L. C., & Nieuwenhuis, R. (2015). Family policies and single parent poverty in 18 OECD countries, 1978-2008. *Community, Work & Family*, 18(4), 395-415.

4) 유해미, 서문희, 한유미, 김문정. (2011). 영아 양육비용 지원정책의 효과와 개선방안-양육수당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홍정림. (2013). 보육비 지원 정책의 효과성 분석. *한국인구학*, 36(4), 95-118.
 서문희, 이혜민. (2014). 영유아 교육·교육 재정 증가 추이와 효과: 2004~2014. 육아정책연구소.
 송헌재, 우석진. (2015). 보육지원정책이 출산율과 여성 노동시장 참여율에 미친 거시적 성과 실증분석. *재정정책논집*, 17(1), 3-36.

5) 김정호, 홍석철. (2013). 보육료 지원의 여성노동공급 및 출산효과 분석. *한국경제연구원*.
 송헌재, 우석진. (2015). 보육지원정책이 출산율과 여성 노동시장 참여율에 미친 거시적 성과 실증분석. *재정정책논집*, 17(1), 3-36.
 유해미, 서문희, 한유미, 김문정. (2011). 영아 양육비용 지원정책의 효과와 개선방안-양육수당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최은희, 조택희. (2016). 패널분석을 이용한 합계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6(8), 59-70.

6) 여유진, 김미곤, 김태완, 양시현, 최현수. (2005). 빈곤과 불평등의 동향 및 요인 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아동가구’는 아동이 있는 가구를 말함. ‘아동’은 「아동복지법」상으로 만 18세 미만이지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에 따라 관련 법령에서 정한 연령은 상이함.
 - 이 글은 아동가구 소득지원제도가 아동을 부양함으로써 발생하는 재정적 지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라는 측면에서 접근함. 따라서 아동가구 소득지원제도를 만 18세 미만 아동이 수급 자격 조건이 되는 제도로 정의함.⁷⁾
 - 단, 학령전기인 만 0-5세를 대상으로 하는 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등의 일부 제도를 고려해 이 연령의 아동이 있는 가구에 대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살펴봄.
- 아동가구에 소득을 지원하는 방식은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과 같이 매달 일정액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과 특정 달에 세금을 환급하는 방식인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 지출을 전제로 관련 서비스 이용에 대한 지출을 보전해 주는 보육료 지원이 있음.⁸⁾
 -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을 지원하는 주요 수단인 아동수당이 2018년 9월부터 시행되었으나, 이용할 수 있는 자료가 제한적이므로 제외함. 자녀장려금은 2015년에 시행되었으므로 이후 시점을 대상으로 함.
 - 따라서 이 글에서는 아동 대상 소득지원제도를 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근로장려세제, 자녀장려세제로 한정하였음.
- [그림 1]은 만 0-5세 아동가구만을 대상으로 소득분위를 나누어 각 분위 집단의 개별 소득지원제도 급여액 분포를 보여 줌.⁹⁾ 대부분의 소득지원제도 급여액은 1분위와 2분위에 집중되어 있으나, 보육료 지원과 가정양육수당 급여액은 제도가 확대된 이후 모든 소득분위에 균등하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보육료 지원 급여액은 2010~2012년에 시장소득 기준 1분위에서 25~33%의 비율을 차지하고 2분위에서 27~31%로 높지만, 제도가 확대된 2013년부터 각 분위에서 적게는 15%에서 많게는 23%로 비교적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가정양육수당 급여액은 2010년에 1분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에 가까운 48%임. 제도가 확대된 2013년 이후에는 2분위에서 5분위까지 비교적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음.
 - 2016년에 가정양육수당 급여액은 1분위가 27%, 2분위가 23%로, 1분위와 2분위가 약 5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보육료 지원 급여액에 비해 가정양육수당 급여액이 상대적으로 저소득계층에서 약간 더 높은 비율을 보임.
 - 근로장려금 급여액은 2010년에 1분위의 비율이 51%이고 이후에 소폭으로 등락을 반복하지만, 전체적으로 1분위의 비율이 절반에 가깝거나 절반을 약간 넘는 수준을 유지함.
 - 근로장려금 급여액은 2010년에 2분위의 비율이 36%이며 2015년을 제외하면 2분위에서 28% 이상을 차지하여, 1분위와 2분위의 비율이 근로장려금 총급여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자녀장려금 급여액은 1분위의 급여액 비율이 48~56%로 가장 높고, 2분위의 비율 또한 23~37%로 높게 나타남. 4분위와 5분위의 비율은 10%가 되지 않아 대부분의 급여액이 1분위와 2분위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남.

7) 아동이 있는 가구 중 다른 종류의 소득 지원을 받는 경우가 있음. 예를 들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생계급여를 받는 아동가구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이 경우는 ‘아동’을 수급 자격 조건으로 보지 않음.

8) 보육료 지원은 보육서비스 이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현물로 분류하지만, 이 글에서는 취업모의 소득활동을 도와 가구 내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과 함께 지원 대상 가구에 보육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해당 지출만큼 가구 내 소득을 보전하여 아동가구의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아동가구 소득지원 제도로 봄. 보육료 지원에 따른 가구 내 소득 증가에 대한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서는 보육료 지원이 여성의 취업활동을 증가시켰는지, 취업활동으로 가구 내 소득이 증가했는지, 취업 전과 이후의 소득 수준이 변화했는지, 기타 소득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무엇인지를 고려해야 하고 보육료 지원이 없을 때 지출이 어느 정도 보전되었는지 등의 정보가 필요하나, 지면의 제약이 있는 데다 이 글의 범위를 벗어나는 연구 주제이므로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았음.

9) 소득분위는 일반적으로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구분하지만 아동가구만을 대상으로 소득분위를 나눈 것은 아동가구 간 불평등과 재분배 효과를 분석하기 위함임. 이 글에서 다루는 소득지원제도 또한 아동이 있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한정하였기 때문임. 전체 가구 대상의 소득분위 구분에 따른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은희 외(2018) 연구를 참조하기 바람.

[그림 1] 만 0-5세 아동가구의 소득분위별(만 0-5세 아동가구 기준) 소득지원제도 급여 분포

(단위: %)



주: 가로축은 기준 연도(조사 연도의 전년도)를 의미하고, 소득은 기준 연도의 연간 시장소득이며, 소득분위는 만 0-5세 아동가구를 기준으로 구분한 것임.
 자료: 연도별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3. 아동가구 소득지원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 소득재분배 효과를 측정하는 방식은 다양하지만, 이 글에서는 폭넓게 활용되는 지니계수를 이용함. 지니계수는 일반적으로 개인 단위로 측정하지만 최근에는 가구 단위 분석의 유용성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어 가구 단위의 결과도 제시함.

○ 아동이 생활하는 단위는 개인이 아닌 가구이고, 가구 내에서 다양한 자원을 공유하며, 아동의 개인 간 격차분 아니라 아동이 생활하는 가구 간 격차가 중요한 관심사이기 때문임.¹⁰⁾

10) Chiappori, P.-A., & Meghir, C. (2015). Chapter 16 – Intra-household Inequality. In A. B. Atkinson & F. Bourguignon (Eds.), *Handbook of Income Distribution* (Vol. 2, pp. 1369-1418): Elsevier.
 Kanbur, R. (2016). *Intra-household Inequality and Overall Inequality*. WP 2016-11. NY: Cornell University.

- 이 글에서 다루는 아동 대상 소득지원제도의 정책 대상자 연령은 주로 만 0-5세이지만 아동과 아동가구에 대한 불평등 또한 주요 관심사이므로 만 0-5세 아동가구와 만 18세 미만 아동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모두 제시하고자 함.
- 만 18세 미만 아동가구와 아동을 대상으로 소득지원제도의 불평등 완화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음. 분석 결과, 가구 단위와 개인 단위에서 소득지원제도의 불평등 완화 효과는 다소 등락을 보이지만 2014년 이후에는 증가 추세를 보이며, 개별 소득지원제도 중에서 보육료 지원의 불평등 완화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아동가구 소득지원제도를 모두 고려했을 때 아동가구에 대한 불평등 완화의 총효과는 2010년 1.6%에서 2016년 2.4%로 증가하였으며, 아동 대상 불평등은 2010년 1.8%에서 2016년 2.8%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1> 아동가구 소득지원제도 불평등 완화 효과: 만 18세 미만 아동가구 및 아동

(단위: %)

<만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

연도	시장 소득									4개의 소득지원제도		가처분소득 ¹¹⁾	
		보육료 지원		양육수당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2010년	34.52	34.05	(1.37)	34.49	(0.10)	34.48	(0.12)			33.97	(1.59)	31.63	(8.39)
2011년	32.39	31.82	(1.76)	32.36	(0.12)	32.35	(0.14)			31.74	(2.01)	28.49	(12.05)
2012년	32.25	31.72	(1.66)	32.22	(0.09)	32.20	(0.16)			31.64	(1.91)	28.48	(11.69)
2013년	31.32	30.91	(1.31)	31.20	(0.39)	31.28	(0.12)			30.75	(1.80)	27.70	(11.55)
2014년	33.87	33.37	(1.47)	33.73	(0.40)	33.82	(0.14)			33.19	(1.99)	30.28	(10.59)
2015년	38.88	38.35	(1.36)	38.75	(0.32)	38.80	(0.20)	38.80	(0.22)	38.07	(2.08)	36.11	(7.13)
2016년	30.87	30.40	(1.51)	30.75	(0.39)	30.79	(0.25)	30.77	(0.30)	30.12	(2.43)	27.40	(11.22)

<만 18세 미만 아동>

연도	시장 소득	보육료 지원		양육수당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4개의 소득지원제도		가처분소득	
2010년	34.79	34.24	(1.58)	34.74	(0.14)	34.75	(0.11)			34.16	(1.83)	31.99	(8.04)
2011년	32.05	31.38	(2.11)	31.99	(0.2)	32.01	(0.14)			31.27	(2.44)	28.11	(12.31)
2012년	31.3	30.67	(1.99)	31.25	(0.16)	31.24	(0.18)			30.57	(2.33)	27.56	(11.93)
2013년	31.02	30.54	(1.56)	30.89	(0.43)	30.98	(0.14)			30.37	(2.11)	27.48	(11.43)
2014년	32.07	31.5	(1.75)	31.91	(0.49)	32.02	(0.15)			31.31	(2.37)	28.53	(11.04)
2015년	34.96	34.39	(1.62)	34.82	(0.4)	34.89	(0.2)	34.87	(0.27)	34.1	(2.47)	32.01	(8.45)
2016년	30.81	30.25	(1.82)	30.67	(0.44)	30.73	(0.25)	30.7	(0.34)	29.94	(2.82)	28.11	(8.75)

주: 균등화된 소득을 활용한 지니계수임. 괄호 안은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 대비 변화율임. 연간 소득 및 소득지원제도의 측정 기준은 조사 연도의 전년도임(기준 연도). 한국복지패널에서 제공하는 가구 가중치를 기본으로, 만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의 더미변수와 가구 내 아동의 수를 곱한 아동 가중치를 활용해 만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와 만 18세 미만 아동에 대한 불평등 완화 효과를 산출함.

자료: 연도별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11) 이 글에서 가처분소득은 OECD에서 사용하는 조정가처분소득과 같이 보육료 지원이나 바우처 등의 공적 현물이전까지 포함한 개념임.

- 아동가구 소득지원제도 중 불평등 완화 효과가 가장 큰 제도는 보육료 지원임. 2010년에 아동가구 대상 불평등을 1.4% 정도 감소시키고 2016년에는 1.5% 정도 감소시킴. 아동 개인 불평등은 2010년 1.6% 정도 감소시키고 2016년에는 1.8% 정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음.
 - 가정양육수당의 불평등 완화 효과는 2010년에 아동가구 불평등을 0.1% 정도, 2016년에는 0.4% 정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가정양육수당의 불평등 완화 효과는 미미하지만 점차 확대되는 경향을 보임. 아동 개인의 불평등은 2010년 0.1% 정도에서 2016년 약 0.4%로, 아동가구 불평등과 마찬가지로 미미하지만 점차 불평등 완화 효과가 증가함.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불평등 완화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근로장려금은 아동가구와 아동 개인의 불평등을 2010년 0.1% 정도에서 2016년 0.3% 정도 완화시킴. 자녀장려금은 2015년 시행 이후 아동가구와 아동 개인 불평등을 0.2-0.3% 정도 감소시킴.
- <표 2>는 만 0-5세 아동이 있는 가구 및 아동 대상 소득지원제도의 불평등 완화효과를 제시하고 있음. 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총급여의 불평등 완화 효과는 등락을 보이다 제도가 확대되는 시기 이후에 그 효과가 커짐.
- 4개의 소득지원제도를 포괄한 총급여는 만 0-5세 아동가구 불평등을 2010년에 4.8% 정도 감소시킴. 이후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지만 2016년에 약 5.7%까지 감소시켜, 아동가구 대상 소득지원제도의 불평등 완화 효과가 확대되었음. 4개 소득지원제도의 총급여는 만 0-5세 아동 불평등을 2010년에 약 5.2% 감소시킨 이후 증가하다 다시 감소하고, 2016년에는 약 6.3%로 다시 증가함.
- 개별 제도 중에서는 보육료 지원의 불평등 완화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¹²⁾ 앞서 만 18세 미만 아동가구 및 아동을 대상으로 분석했을 때보다 만 0-5세 아동가구 및 아동을 대상으로 분석했을 때 불평등 완화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보육료 지원의 만 0-5세 아동가구 불평등 완화 효과는 2010년 4.6%이며 이후 오르다가 다시 감소하여 2016년에 약 4.7%로 유지됨. 그러나 이러한 수준은 다른 제도의 불평등 완화 효과가 최소 0.1%에서 최대 1.8%인 것에 비하면 크다고 할 수 있음.
 - 가정양육수당의 불평등 완화 효과는 미미하지만 등락이 반복되다가 2013년 이후 다소 확대됨. 아동가구 불평등은 2010년 약 0.3%에서 2016년 1.1% 정도, 아동 불평등은 2010년 약 0.4%에서 2016년 1.3% 정도 완화된 것으로 나타남.
 - 근로장려금의 불평등 완화 효과는 연도별로 등락을 반복하며 유지되는 경향을 보임. 아동가구 불평등은 2010년 0.1% 정도에서 2012년 0.2% 정도로 확대되었다가 2016년 0.1% 정도로 유지되며, 아동 불평등도 이와 유사함. 자녀장려금의 불평등 완화 효과는 2015년 도입 이후 0.2% 정도를 유지함.

12) 그러나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와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를 비교해 보면 4가지 소득지원제도에 따른 지니계수 감소 효과보다 기타 공적이전 및 조세제도에 따른 불평등 완화 효과가 더 큼.

〈표 2〉 아동가구 소득지원제도 불평등 완화 효과: 만 0-5세 아동가구 및 아동

(단위: %)

〈만 0-5세 아동이 있는 가구〉

연도	시장 소득									4개의 소득지원제도		가처분소득	
		보육료 지원		양육수당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2010년	26.68	25.53	(4.3)	26.59	(0.32)	26.64	(0.14)			25.41	(4.77)	24.72	(7.33)
2011년	29.04	27.6	(4.96)	28.93	(0.38)	28.99	(0.18)			27.45	(5.49)	25.83	(11.05)
2012년	27.48	26.16	(4.82)	27.4	(0.3)	27.42	(0.23)			26.02	(5.32)	24.63	(10.37)
2013년	26.69	25.73	(3.6)	26.35	(1.27)	26.64	(0.19)			25.33	(5.09)	24.41	(8.55)
2014년	28.11	26.95	(4.1)	27.7	(1.43)	28.07	(0.11)			26.51	(5.66)	25.56	(9.07)
2015년	49.57	48.01	(3.14)	49.18	(0.77)	49.52	(0.1)	49.49	(0.15)	47.51	(4.15)	47.68	(3.8)
2016년	30.37	29.08	(4.24)	30.03	(1.13)	30.34	(0.09)	30.3	(0.24)	28.64	(5.68)	27.83	(8.37)

〈만 0-5세 아동〉

연도	시장 소득									4개의 소득지원제도		가처분소득	
		보육료 지원		양육수당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2010년	26.28	25.07	(4.6)	26.17	(0.42)	26.25	(0.14)			24.92	(5.17)	24.42	(7.11)
2011년	28.35	26.78	(5.55)	28.23	(0.42)	28.3	(0.18)			26.62	(6.11)	25.13	(11.35)
2012년	26.82	25.32	(5.6)	26.74	(0.31)	26.77	(0.21)			25.19	(6.09)	23.92	(10.82)
2013년	26.71	25.61	(4.12)	26.34	(1.41)	26.65	(0.22)			25.17	(5.76)	24.24	(9.24)
2014년	27.28	26.02	(4.63)	26.79	(1.8)	27.25	(0.1)			25.5	(6.52)	24.58	(9.89)
2015년	46.11	44.41	(3.69)	45.64	(1.01)	46.06	(0.09)	46.03	(0.17)	43.83	(4.94)	43.95	(4.69)
2016년	30.46	29.03	(4.68)	30.06	(1.31)	30.44	(0.08)	30.39	(0.23)	28.55	(6.27)	28.29	(7.13)

주: 균등화된 소득을 활용한 지니계수임. 괄호 안은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 대비 변화율임. 연간 소득 및 소득지원제도의 측정 기준은 조사를 실시한 연도의 전년 도인 기준 연도임. 한국복지패널에서 제공하는 가구 가중치를 기본으로, 만 0-5세 아동이 있는 가구의 더미변수와 가구 내 아동의 수를 곱한 아동 가중치를 활용하여 만 0-5세 아동이 있는 가구와 만 0-5세 아동에 대한 불평등 완화 효과를 산출했음.

자료: 연도별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4. 나가며

- 이 글에서는 한국복지패널 원자료를 활용하여 국내 주요 아동가구 소득지원제도의 급여 분포와 불평등 감소 효과를 분석하였음. 보육료 지원과 양육수당,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서는 원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소득지원제도로 소득재분배 효과를 확인하였음.
- 아동 대상 소득지원제도의 불평등 완화 효과는 전체적으로는 증가하는 추세임. 이는 정부의 아동 대상 소득지원제도가 확대되는 추세와 관련 있음. 특히 보육료 지원이 가장 큰 규모로 확대되고 있어 불평등 완화 효과 또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예상했던 바와 같이 정책 대상자 집단인 만 0-5세 아동으로 한정하여 분석할 때 불평등 완화 효과는 만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분석할 때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전체 아동 대상 불평등 완화 효과보다 만 0-5세 아동 대상 불평등 완화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이유는 실제 보육료 지원이나 가정양육수당이 만 0-5세 아동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며, 급여액 또한 1분위와 2분에 분포하는 비율이 높음.
 - 전체 아동가구와 아동의 불평등을 더 완화하기 위해서는 만 0-5세에 집중되어 있는 제도를 전체 아동 대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여 가구 내 노동소득을 높이는 방식은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보육료 지원의 규모가 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보육 확대를 통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가 아동빈곤이나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남.¹³⁾
- 보육료 지원은 지출을 전제로 한 소득지원제도이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도와 가구 내 시장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제도임. 엄밀한 분석을 위해서는 보육료 지원에 따른 시장소득 증가와 지출 구성의 변화 등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함. 이는 이 연구의 한계로, 추후 연구가 필요한 영역으로 제안하고자 함.
- 우리나라는 아동가구 간 소득불평등이 낮아지고 있지만, 아동 대상 소득지원제도의 규모가 다른 나라에 비해 크지 않음. 또한 아동가구 소득지원제도의 불평등 완화 효과나 빈곤율 감소 효과는 그 크기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임.¹⁴⁾ 따라서 장기적으로 아동가구 대상 소득지원제도의 규모를 늘리는 것이 필요함.
- 어떤 경우에서든 아동에게 계층 상승의 기회는 열려 있어야 함. 아동의 현재 소득 지위에 대한 원인이 아동에게 있지 않으며 자신의 선택에 의한 결과도 아니기 때문임.
 - 또한 현재 본인의 노력으로 바로 계층 상승으로 이어지지도 않을뿐더러 노력할 수 있는 자원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노력의 기회조차 얻기 힘들기 때문임.

13) 정은희, 백승호, 김성아. (2018). 아동가구 소득지원제도 소득재분배효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4) 위의 책.

집필자 정은희(소득보장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김성아(소득보장정책연구실 전문연구원)
문의 044)287-818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의 발간자료에서 온라인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www.kihasa.re.kr